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요즘 MZ세대들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 미군정 이후 37년간 유지되었던 야간통행금지법으로 밤 12시가 되면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시는 정적의 암흑세계가 되었다. 개인의 활동을 사·공간적으로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 금지조치는 88서울올림픽 개최 결정을 계기로 1982년 해제되었다. 그 이후 경제·산업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연히 구별되는 생활패턴 중에서 '밤 문화'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크게 변화하였다. 야간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식·음주문화'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각종 모임이 금지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2년 코로나19가 물러간 이후 한때 경기가 살아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조끼 귀가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밤 9시 이전에 식당을 비롯한 상가들의 간판 불도 꺼졌다. 통행인도 뜸해진 한산한 거리에는 자동차마저 드문드문 지나간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임대'가 나날

야간활동과 도시의 기회

은 상점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띈다. 이 황량한 거리 풍경과 함께 요즘 자주 등장하는 '지방소멸', '저출산' 등이 겹쳐지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우리 지역이 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문득문득 느껴진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밤을 도시의 활성화 전략에서 핵심 요소로 중시한다. 또한 '24시간 도시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24 Hour City)'을 추진하면서 낮과 밤의 활동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런던, 암스테르담, 시드니, 뉴욕 등의 도시들은 야간 시장(Night-life Mayor)제를 도입하고 야간 교통수단을 확충하며 야간 관광 및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야간경제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야간경제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작년 5월 서울시에서는 야간 문화활동과 그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 중 78.8%가 야간활동 경험을 있으며, 야간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은 68.9%에 달했다. 여기서 '야간활동'이란 오후 6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하는 야간개장 시설 방문, 경관 관광, 체험활동, 엔터테인먼트 등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시민이 선호하는 야간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사회교육·관광·여가·문화·생활체육' 순이며, 고려사항은 '안전·안전-쓰레기·소음·야간 교통수단 이용 편의 제고·상점 영업시간 연장' 등이 제기되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야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으로는 축제 이벤트, 야시장, 루미나리에(중심시가지의 야간 경관 조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때 유행처럼 지방도시의 중심가로를 번쩍번쩍하게 수놓았던 루미나리에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소리 없이 사라졌다. 또 도시의 우수한 시책이더라도 모방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반면교사의 사례이다.

늘어나는 '임대' 상점과 어두운 야간 가로 풍경 뒤편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만 가는데 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고금리, 경기침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밤 문화는 낮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매력을 즐기기 위해 특정한 목적지 없이도 야간에 외출하고 싶어 한다. 도시민들이 특별한 제약이 없는데도 야간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은 별로 즐길 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야간 도시공간에 매력 있는 장소를 만드는 지혜가 핵심이다.

국내의 여러 도시들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야간 문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먼저 지자체는 그 도시들에서 좋은 사례를 찾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간 현황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진단해서, 야간경제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와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도시민은 야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대학교 교수

맞춰둔 시간을 따라 뱀이 울린다. 무거운 눈꺼풀을 털고 일어났다. 갈 곳이 없다는 퇴직한 친구를 낚두리를 위한 삼아 출근길을 나선다. 조금 후 시간이면 도로를 차들로 꽂찰 것이다.

그리 보면 사람들은 시간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뿔뿔히 바퀴처럼 움직이는 기계 같다. 자기 의지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조종하는 대로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며, 퇴근한다. 버스나 전철, 심지어 배달 음식이나 커피를 기다리는 일조차 그 기준은 시간이다. 약속도 정하고 나면, 이후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 대부분 하루를 시간에 따라 할 일을 생각하고 움직인다. 시간은 산처럼 직접하게 명한다. 기상하다. 영화가 시작되겠다. 서둘러라. 빨리 잠을 자거라. 8살이다, 학교 가라. 서른이다, 취업해라. 50분은 일해라. 그리고 심지어 10분간 쉬라고 휴식 시간까지 관여한다. 그리고 시계는 끊임없이 지켜보며 확인한다. 이강백 작가의 '결혼'의 핵심어는 '시간'이다. 텅이

신(神)과 인간, 존재의 시간

라는 여자가 여느 여자들처럼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가난뱅이 주인공은 많은 물건을 빌려 결혼식을 올린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하는 빌린 것들이다. 남자는 물건들이 되돌려지기 전에 결혼 승낙을 받아내야 한다. 주인공은 여인에게 결혼의 가장 소중한 의미가 소유가 아닌 사랑임을, 물건이 되돌려지는 '시간' 과정에서, 설득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시간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통찰한 작품이다.

우리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 듯 쓰지만,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을 신쫓단지처럼 떠받치고 살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존재라는 것, 역시 모르는 바보 또한 아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무언가 쫓기며 산다. 돌아보면 시간이고 그래서 시간에 쫓겨 허허거리며 거친 숨을 쉰다. 어쩌면 그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호흡이 우리 인생 같다. 그 찰나의 숨이 목숨이고 숨이 휴식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나마 연장해보려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시간의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신(神)이라는 절대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축약하고 또 줄이다 신이라는 파생어를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법이 없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썩을 튀우고 열매를 맺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누구나 생의 가을이 되면 빨리 흘

러가는 시간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감하고 숙연해진다. 우리 지금 시간이라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찰나를 사는 인생은 연극이면서 시간 예술이다. 그 시간이 멈춘 순간이 장례식 날이다.

신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시간이다. 영원 불사의 신과 달리 우리 찰나의 존재이다. 다만 우리 제한된 시간을 가지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지배할 것인지 그리스 신화는 그 답을 들려준다.

시간을 관찰하는 두 신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다.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달리 카이로스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 심리적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라는 의미다. 다만 카이로스는 앞 머리칼은 가나 뒷머리는 없다.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간직하려면 그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꼭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뒷머리는 붙들 수 없다. 곧 기회를 잘 활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존재는 시간의 길이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뜻 있는 시간을 산다면 우리 잘 사는 셈이다. 시간이 사지로 밀어붙이면 나는 더 멀어지지 않고 녀석 앞머리를 꼭 붙들 잡는다. 그리고 꼭 내가 너의 인인이 아닌 주인임을 천명하고, 남은 시간 의미 있게, 녀석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社說

총선 본 게임 시작, 정권 심판론 바람 얼마나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 정당별로는 21일과 22일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당장 첫 주말부터 격전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졌다. 총선 후보 등록 결과 민주당이 36명이,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4.5대1, 전남 3.6대1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4.5대1, 전남 3.6대1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4.5대1, 전남 3.6대1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가 관건이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대 중반으로 박빙이지만 최근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두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어 야권 승리에 힘을 실고 있다. 한 국궐입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 결과 정부 견제론에 응답한 사람(51%)이 정부 지원론에 답한 사람(36%)보다

15%포인트 앞섰고 지난 17-19일의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정부 견제론(54%)이 정부 지원론(39%)보다 15%포인트 높게 나왔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선 이같은 정권심판론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나라를 망치는 윤 정권과의 대결이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을 파고 들었다. 여기에 보다 선명하게 정권심판 기치를 내걸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어 정권심판론 바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호남은 텃밭인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추거나 '집토끼 대하듯' 지역 유권자를 대하면 승리를 담담할 수 없다.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후보들에게 언행에 조심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게 바로 선거다.

전남 김, 'K푸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

전남지역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대상지가 4곳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안군과 해남군이 '김 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처음 지정된데 이어 지난 21일 진도군과 장흥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4개 군은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소 당 5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을 지원받아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발 벗고 나선다. 앞서 지정된 신안과 해남군은 마른 김 가공업체 위생·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김 수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진도와 장흥군 또한 고품질 김 생산과 가공·유통·수출 등 김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이자 '슈퍼푸드'인 김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수출액이 1조 원(7억7000만 달러)을 달성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맞춰 김밥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산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도 불린다. 웰빙과 건강을 추구하는 지구촌 'K푸드' 열풍에 따라 김의 수요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품질 전남산 김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정바다 보존은 물론 친환경 유기인 증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김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남지역 김 생산자가 자리해야 한다. 국내 생산량의 75%(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전남산 김이 'K 푸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김 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각 군은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순천 송광사 국사전(國師殿)에 있는 16조사 진영(十六祖師眞影, 보물 1043호)은 조선 중기 불교 초상화 기법을 알려주는 걸작이다. 16조사 진영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을 비롯해 송광사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에 활약한 고승 16명을 그린 초상화 16점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한 초상화들은 정조 4년(1780)에 국사전에 봉안됐다. 1990년 16점이 일괄 보물로 지정됐으나 13조사 진영은 1995년 1월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하다. 현재 보조·진각·정혜국사 영정 3점만 남아 있다.

도굴의 특성상 피해 문화재가 회수되기 전까지는 도굴 점수를 파악할 수 없다. 절도범들은 훔친 문화재를 수십년 은닉했다가 은밀하게 거래하고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다. 문화재청과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0년 국내 경매시장에 등장한 '몽산화상범어약목(蒙山和尚法苑珠林略, 보물 제767-2호)은 특이한 케이스다. 1993년 이전에 도둑맞은 장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낙찰받은 한글박물관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문화재의 수난

불교계에서는 도난당한 사찰 문화재가 워낙 많다보니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출간하는 등 환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난 문화재는 모두 3만885점에 달한다. 그림, 공예·조각품, 고문서, 민속자료 등 '비지정 문화재'가 2만8431점(92%)으로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난 문화재 가운데 회수한 문화재는 모두 6744점으로, 회수 비율은 22%에 그쳤다. 도난이나 도굴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비율이 10점 가운데 2점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선시대 학자인 미암(眉巖) 유희춘(1513~1577) 선생의 문집을 찍어낸 목판(총 402판) 2점이 최근 고향 담양으로 돌아왔다. 1982년 도난당한 6점 가운데 이번 회수된 2점은 미암박물관 관계자가 2014년 전남대박물관 소장품을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나머지 4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희춘 선생의 문집 목판과 국내 도난 문화재들이 환지부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감) 될 날을 고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고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되려면



김대준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6700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출생아 수 1위를 차지했다. 과거 '화성'하면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돼 부정적 이미지가 오버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도시 조성과 첨단 산업단지가 속속 터를 잡으면서 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등 그야말로 상진벽해(桑田碧海)가 됐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 평균 연령은 39세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친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선두인 '부자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화성시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에 22개나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곳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미래분야 2만7000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젊은 인구가

모이고 저렴한 주택 공급과 육아 인프라 조성을 통해 출산율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화성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에 유리하고 교통 및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등 정주여건도 좋은 편이다.

열악한 여건의 지방 광역 시도 역시 상대적 불리함을 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공기업들이 적극 나서서 침체돼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대표적 분야가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성후에 원가로 기업들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공공형 사업이다.

문제는 지방공기업들의 투자여력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만 해도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수 천억원씩 투입되는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공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가 벅겁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들의 재정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금 내지 자본전출금 등 다양한 자본 확충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게 시급하다.

일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공사(LH)처럼 지방공기업에도 부채로 인식되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방공기업에 출자금 형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출자금으로 지원하면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포함한 자본이 늘어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부채비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절박한 시기에 공익적 사업을 위한 관련 기금법에 한시적 특례조항으로 정해서라도 지방공기업들에게 출자지원을 해주다면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대전시가 민선 8기 시의 핵심사업인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았다. 공사의 자본금만 1조 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출자가 완료되면 최대 1조 89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산단 조성이나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여타 광역 시도 지방공기업들도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지원받기 위해 고심이 깊다.

전남의 인구 180만명대가 빠르면 올 상반기 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구절벽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전남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재정 규모를 내실있게 더 키워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도민과 함께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겨 열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